

2014 서울시 7급

행정학

해설 : 이동호 교수

본 문제의 해설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
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주민소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간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

해설 ②

- ①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제1항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④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한 주민 직접참여 방식의 제도이다.
- 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사·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사·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02.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유재는 잠재적 사용자의 배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자원이다.
- ②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과 집단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딜레마 현상이다.
- ③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은 개인의 합리성 추구로 인해 공유재가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 ④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 ⑤ 공유재는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 자원이다.

해설 ④

- 하딘(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사유재산권 강화, 출산 및 이민 억제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자원 수탈이 공유지라는 이유로 발생한다고 하면, 공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둘째, Hardin은 인구 억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인구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구가 적절하게 관리되면 자원을 쓰더라도 지구의 부양 능력 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①, ②, ③, ⑤가 명백하게 맞는 지문들이기에 소거법에 따라 ④를 골라야 한다.

03.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이다.
- ②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이다.
-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 ④ 사회자본은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 ⑤ 사회자본의 교환은 시간적으로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②

②는 전통적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남궁근).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는 받은 것만큼 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회자본을 매개로 한 거래에서는, 예컨대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하여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든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제로섬(zero-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04. 다음 중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다.
- ③ 평가방식으로 볼 때 하향식 평가방식이다.
- ④ 정권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특정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집중적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특정평가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한 종류이다.

해설 ①

- ①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은 부처 간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특정평가는 사후적으로 국무총리가 평가측면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통합관리 평가를 하는 것이며, 하향적·사전적으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을 하기에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②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 통합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는 구분된다.
- ③ 특정평가는 자체평가와는 달리 국무총리에 의한 하향식 평가로서 평가대상기관은 특정평가 부문별로 평가실시에 필요한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정경길).
- ④ 특정평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경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 노무현 정부에서는 혁신 관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⑤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5항). 이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평가의 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05. 정책평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구성적 타당성은 정책결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설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한다.
-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효과가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 ③ 질적 평가는 주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
- ④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해설 ⑤

- ①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질적 평가 혹은 비계량 평가는 정책사업 수행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해서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냈는 산출물 등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새행정학).
- ④ 논리모형(logic model) 혹은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정책 프로그램의 요소들과 정책 프로그램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사이의 논리적 인과 관계를 투입-활동-산출-결과로 정리해 표현해주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이자 텍스트로 볼 수 있다(새행정학).
- ⑤ 프로그램이 핵심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 실패를 구

분할 수 있도록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06. 효과성 평가모형 중 퀴노와 로보그(Quinne & Rohrbaugh)의 경합가치모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조직이 내부·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와 조직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조직효과성에 관한 네 가지 경쟁모형을 도출하였다.
- ②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효과성 평가유형은 인간관계모형이다.
- ③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며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의 평가유형이다.
- ④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다.
- 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경우 안정성 및 균형을 목표로 하게 된다.

해설 ④

④는 개방체제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보다는 융통성을 강조하며 성장 및 자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김병섭).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은 합리목표 모형으로써, 생산성과 능률성을 목표로 한다.

경합가치 모형

초점		구조		외부	
내부	통제	융통성		통제	
		인간관계 모형 목표가치: 인적 자원 개발 하위목표: 응집력, 사기	개방체제 모형 목표가치: 성장, 자원 확보 하위목표: 융통성, 외적 평가	내부과정 모형 목표가치: 안정성, 균형 하위목표: 정보관리	합리목표 모형 목표가치: 생산성, 능률성 하위목표: 기획, 목표 설정

07.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 ② 규제영향분석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 결정도구이다.
- ④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왔으며, OECD에서도 회원국들에게 규제영향분석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 ⑤ 규제 외의 대체수단 존재여부, 비용-편익분석,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③

규제영향분석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현존하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도구”다. 규제는 한번 도입되면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08. 베버(M.Weber)의 관료제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된다.
- ② 이상적인 관료제는 비정형성(impersonality)에 따라 움직인다.
-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 ④ 관료제는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분업의 원리에 따른다.
- ⑤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명하복의 질서정연한 체제이다.

해설 ③

이상적인 관료제는 정치적 전문성이나 귀속적 기준이 아닌 기술적 자격에 의해 충원되는 제도를 갖는다.

09.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보상체계의 강화
- ②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확립
- ③ 목표에 의한 관리체계의 구축
- ④ 상부책임제도의 강화
- ⑤ 고충적·계층적 조직구조의 확립

해설 ③

③은 Y-이론 측면에서 조직의 관리전략에 해당한다.

McGregor는 목표관리의 철학이 부하에 대한 단점보다는 장점과 잠재 능력을 살려 근무 성과를 높게 하는 점, 판단자가 아니라 조력자로서 상사의 역할, 통합과 자기 통제에 의한 관리, 과거의 행동보다는 미래의 행동을 강조하는 점 등을 보아 Y이론 지향이라고 했다(새조직원).

10. 조직문화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 ② 문화강도적 접근방법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 ③ 특성론적 접근방법은 긍정적인 문화를 가진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간주한다.
- ④ 상황론적 접근방법은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고 전제한다.
- 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은 문화 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 효과성이 각각 달라진다고 여긴다.

해설 ④

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경우, 공유된 가치는 구성원들의 신념 또는 행동에 나타나며, 모든 구성원에게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관리자들 역시 일률적으로 정리된 방향으로 공동의 가치관을 준수하는 관리 행동을 수행한다. 내부 구성원들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내부 지향적이 된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황론적 접근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구분	내용
특성론적 접근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문화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화강도적 접근방법	조직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즉 조직구성원들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이다. 강한 문화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상황론적 접근방법	조직문화 특성과 상황요인들간의 적합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는 입장으로 조직내·외의 다양한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하고, 마치 무질서보다 질서가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유형론적 접근방법	각각의 문화유형의 특성에 따라 조직효과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문화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들의 내용을 용이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인 분석방법이다.

11. 현대조직이론의 하나인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거래를 외부화(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②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며 조직을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장치로 파악한다.
- ③ 조직통합이나 내부 조직화는 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클 때 효과적이다.
-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거래비용이론은 민간조직보다는 공공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해설 ②

①, ③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의 내부화, 즉 통합(integration)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이 거래비용경제학이다(새조직원).
④ 거래비용에는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탐색비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내부조직은 기회주의적 행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장한다.

⑤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이라는 제도 대신 계층제적 기업조직이 생기는 이유를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으로, 공공조직보다는 민간조직에서 적용가능성이 높다.

물론 오늘날 공공조직에서도 민간위탁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거래비용은 필요자원의 직접조달과 아웃소싱(outsourcing)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정부의 경우에도 거래비용이론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주체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시장실패에 의한 정부개입이 강조될 때에는 시장실패에 따른 거래비용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정부의 직접제공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이를 통제하는 데 드는 외부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부각되면서 민간위탁 등의 대안이 힘을 받고 있다(유민봉).

12.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직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승진 탈락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직제와 정원규정이 바뀌어 현재의 공무원 수가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한다.
-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
- ⑤ 강임은 승진과 반대로 현 직급보다 낮은 하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한다.

해설 ①

② 직권면직에 대한 설명이다. 직권면직은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될 경우 등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③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나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다. 권고사직은 흔히 징계 대상 공무원에 대해 가혹한 징계를 모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량 숙청 시 비공식적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된다(새인사행정론).

④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자 등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⑤ 강임(demotion)은 하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강임은 직제 변경 등으로 자리가 없어졌을 경우 퇴직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한때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을 활용했으나, 현재 이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새인사행정론).

13.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 ② 계급 간 승진이 어려워 한정된 계급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다.
- ③ 공무원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 해당 직무에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경력발전이 강조된다.

해설 ③

계급제의 경우 계급 내에서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여 탄력적 인사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일반행정가 양성을 통해 공무원의 시야와 이해력을 넓혀 공무원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새행정학).

14.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경비는?

- ① 과년도 지출
- ②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③ 여비
- ④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⑤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해설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5. 다음은 우리나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 ①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을 갖고 있지 않다.
- ②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한다.
- ④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다.
-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16.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의 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연장할 수 있는데, 매년 연부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하며, 이용(移用)은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을 뜻한다.
- ④ 이체(移替)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용하는 제도이다.
- 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금액, 그리고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해설 ⑤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1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예산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②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 ④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되어야 한다.
- ⑤ 예산은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해설 ④

④ 현대적 예산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계획과 예산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면서 비용·효과적으로 재원을 관리하는 것이다.

18. 다음은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 ㉠ 지방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 ㉡ 집행기관의 행정 사무 처리사항을 조사 및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이 없다.
- ㉣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다.
- ㉤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

- ① ㄴ, ㄷ, ㅁ
② ㄴ, ㄷ
③ ㄴ, ㄷ, ㅁ
④ ㄴ, ㄷ
⑤ ㄴ, ㄷ, ㅁ

해설 ⑤

㉔ 지방의회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5조).

㉔ 광역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위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경당이 임기만으로 따른 지역구지방법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사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 사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동법 제5항).

인터넷 진화에 따른 정부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구분	Government 1.0		Government 2.0		Government 3.0 (u-Government)	
	World Wide Web		Web 2.0		Real-World Web	
접근성	정부중심		시민중심		개인중심	
	First-stop-shop 단일 접속창구(포털)		One-stop-shop 정부서비스 중개기관을 통해서도 접속		My Gov 개인별 정부서비스 포털	
서비스	일방향 정보 제공 제한적 정보 공개 서비스의 시간·공간 제약 공급 위주 서비스 서비스의 전자화		양방향 정보제공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융합서비스 신규 서비스 가치 창출		개인별 맞춤정보제공 실시간 정보 공개 중단 없는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의 지능화	
채널	유선 인터넷		무선인터넷		유무선모바일기기 통합 (채널 통합)	
업무 통합	단위업무별 처리		프로세스 통합 (공공·민간의 협업)		서비스 통합	
기반 기술	브라우저 웹 저장		브로드밴드 Rich Link/Content Models		시멘틱 기술 센서네트워크	

19.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역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
- ② 행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과 부실
- ③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는 지역적인 특수이익에 집착할 가능성
- ④ 시민참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한 행정의 지체와 비능률 초래
-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한 시민의 정책수용 약화

해설 ⑤

시민의 행정참여로 인해 시민들의 정책순응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20. 최근 정부의 정부3.0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 공유, 소통 및 협력을 핵심가치로 사용하고 있다.
- ② 인터넷 사용과 함께 정부와 국민의 면대면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정부의 직접참여보다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 ④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해설 ②

유선 인터넷은 정부1.0, 무선인터넷은 정부2.0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정부와 면대면 접촉이 아니라, 전자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이버상의 연계를 강조한다. 정부3.0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한 양방향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새해경향).